02

# 2장
#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제1절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 34

제2절 북핵문제 진전을 위한 동력 강화 43

제3절 한 · 미 전략동맹의 심화 및 발전 53

제4절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 심화 72

제 1 절

#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

## 1 남북 관계

### 1)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부는 2013년부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일관된 원칙 아래 남북 관계를 이끌어 왔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무력 도발을 확고하게 억지하는 한편,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기존 합의의 이행과 점진적 협력의 관행 축적을 통해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이다.

2015년 8월에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과 DMZ 포격, 준전시 상태 선포 등으로 남북 간 긴장이 극도로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조 아래 원칙에 입각하여 단호히 대응한 결과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긴장 국면 완화를 위한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

### 2) 북한 인권 문제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가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필수 요소라는 인식 아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한편, 북한 주민의 민생 개선 등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오고 있다.

국제사회는 2014년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북한 내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더욱 근본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정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고 북한 당국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 및 유엔총회에서 매년 채택되는 북한 인권결의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북한 상황(situation in the DPRK)'을 논의할 수 있도록 주요 이사국들과 긴밀히 협조함으로써,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권고 및 인권이사회 결의 이행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6월 서울에서 개소되는 데 협조를 제공하였다.

정부는 양자 차원에서도 미국 · EU 등 주요국들과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 방안을 협의해 오고 있으며, 북한 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기구 및 민간 채널을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 3)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및 협력 사업 지원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틀 안에서 북한의 영유아 · 임산부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을 남북 간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해 오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 및 장거리 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대북 지원 사업이 위축된 상황이지만, 정부는 국제기구 및 국내 민간단체를 통해 북한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오고 있다.

2015년 정부는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의 영양식 지원 사업에 210만 달러, 유엔아동기금(UNICEF: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의 백신 · 의약품 지원 사업에 40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또한 유엔기구의 북한 영유아 영양 지원 등 효과적인 대북사업을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해 유엔인구기금(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에서 시행한 북한 지역 사회인구학적 가구조사 사업에 80만 달러를 지원하는 등 2015년 한 해 동안 국제사회를 통해 총 117억 원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 4) 남북 간 인도적 협력

정부는 국내 민간단체들의 북한 내 취약 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과 순수 사회 · 문화 교류를 지원해 오고 있다. 2015년에는 민간단체의 자체 재원으로 114억 원 상당을 지원하였다. 이는 전년도 지원액 54억 원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액수이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단체 대상 남북협력기금 지원 사업을 통해서도 23억 원 상당을 지원하였다.

한편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을 맞은 2015년에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정부는 8월 25일 남북 간 고위급 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 재개에 전격 합의하고, 9월 7~8일 판문점에서 남북적십자실무접촉을 개최하였다. 이 접촉에서 우리 측은 이산가족 간 전면적 생사 확인을 위한 명단 교환, 상봉 정례화, 서신 교환 등을 제안하였으며, 남북은 인도주의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또한 10월 20~26일 금강산에서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1년 8개월 만에 재개된 제2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10월 20~22일 1차 상봉과 24~26일 2차 상봉으로 나뉘어 이루어졌으며, 1차 상봉 때는 북측 방문단 96가족(남측 389명, 북측 141명)이 남측 가족을 상봉하였고 2차 상봉 때는 우리 측 방문단 90가족(남측 254명, 북측 188명)이 북한 내 가족을 만나게 되었다.

이어 12월 11~12일 현 정부 출범 후 개최된 첫 남북 당국회담에서 우리 측은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주요 안건으로 제시하였으나, 북측이 인도적 사안인 이산가족 문제를 금강산 관광 재개와 연계할 것을 고집함에 따라 끝내 합의 도출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 5) 북한이탈주민 문제

2015년 12월 말까지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총 2만 8,795명으로 2015년에만 총 1,276명이 국내에 입국하였다.

**연도별 북한이탈주민 국내 입국 규모**

(단위: 명)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합계 |
|---|---|---|---|---|---|---|---|---|---|---|---|---|---|---|---|
| 1,991 | 1,143 | 1,282 | 1,896 | 1,382 | 2,022 | 2,548 | 2,805 | 2,929 | 2,402 | 2,706 | 1,502 | 1,514 | 1,396 | 1,276 | **28,795** |

출처 통일부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들을 전원 수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신속한 국내 이송을 위해 체류국 정부 및 관련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의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양자정상회의 및 다자회의를 계기로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2015년 9월 15일 한 · EU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필요성과 관련한 문구를 포함시키는 한편, 제28차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3.2~5), 제62차 유엔난민기구(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상임이사회(3.3~5) 및 제63차 UNHCR 상임이사회(6.24~25), 제66차 UNHCR 집행이사회(10.5~9), 제70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10.6~11.25) 등을 계기로 강제송환 금지 원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국내 입국 전 해외에서 대기하는 동안 정신적, 육체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반 후생 · 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전 적응 교육 차원에서 각종 교양 · 학습 도서를 제공하는 한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금 지원, 주거 알선, 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 2 한반도 평화 정착 및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

### 1) 한반도 핵심 주변국과의 통일 논의 모멘텀 마련

한반도 분단이 냉전이라는 국제적 배경에서 시작되었음에 비추어 볼 때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한 간 노력뿐 아니라 주변국의 통일 지지와 건설적인 협조가 긴요하다. 이러한 인식 아래 정부는 미국과 중국 등 한반도 핵심 주변국과의 통일 논의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통일에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미국과는 2015년 10월 16일 한 · 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당면 현안을 넘어 한반도 미래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였다. 한 · 미는 향후 한반도 상황 전개와 평화통일 과정에서 상호 조율된 대북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한반도 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한 · 미 고위급 전략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 · 미 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

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연설에서 제시한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하였고, 이러한 지지를 토대로 양국은 북한 문제에 관한 정상 공동성명으로는 최초로 '2015 북한에 관한 한 · 미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중국과는 2015년 9월 2일 중국 전승 70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한 · 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통일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한편 앞으로 한반도 정세 발전에 대해 의사소통 및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중국 측과 다양한 차원의 논의를 꾸준히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2)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확산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통일에 유리한 국제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통일 정책에 대한 국제 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전개해 오고 있다. 정부는 양자 정상회담 및 다자회의를 계기로 우리의 대북 · 통일 정책의 이해를 제고하고 정상회담 결과문서에 우리 통일 정책을 지지하는 문안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2015년 한 해 양자 및 다자회의 결과문서 총 17건에 우리 통일 정책 관련 지지 문안을 포함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부, 학계,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한반도 정세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우리의 대북 · 통일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 저변의 이해를 높이고 우호적 통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외교 노력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 3) 통일외교 네트워크 확충

정부는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인 2015년을 맞아 분단 극복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통일에 유리한 국제 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적 통일 네트워크 확충 노력을 다각도로 전개하였다.

우선 독일의 통일 경험과 관련된 외교적 지혜를 공유하기 위해 2014년 9월 출범한 한 · 독 통일외교정책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윤병세 외교장관의 독일 방문 때(2015.2.5) 베를린에서 개최하여 독일의 신뢰 구축 경험 및 2+4 조약 체결의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등을 논의하였다. 이어 제3차 회의를 독일 대통령 방한 때인 2015년 10월 12일 서울에서 개최하여 한반도의 신뢰 구축, 민간 차원의 인적 교류 등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제2~3차 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독일의 높은 관심을 재확인하고, 한 · 독 간 통일외교 분야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2014년 7월 17일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4개국으로 구성된 중유럽 지역협력체인 한 · 비세그라드그룹(V4: Visegrad Group) 외교장관 회의시 합의에 따라 출범한 한 · V4 체제 전환 경험 공유 2차 세미나가 2015년 11월 13일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되었다. 이 세미나에서는 V4 국가들의 민영화 전환 경험의 대한반도 시사점 등이 논의되어 한반도 통일에 유용한 조언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 4)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는 역설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지역으로 오늘날에도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비무장지대

내에 남북한과 국제사회가 교류하고 소통하는 평화와 생태의 공간인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구상을 추진 중이다. 이 구상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 확보가 필요한 만큼 정부는 미국, 중국 등 관련국 및 유엔과의 논의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이 한반도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해 오고 있다.





제 2 절

# 북핵문제 진전을 위한 동력 강화

## 1 북핵불용에 대한 확고한 국제 연대 구축

우리 정부는 양 · 다자 정상회의 등 각종 계기에 대통령, 외교장관을 비롯한 각급 채널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확고한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정상회담, 외교장관회담 및 각종 국제회의에서 총 26건의 북핵불용 및 북한의 도발 중단을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도출되었다. 특히 2015년에는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8건의 최초 또는 강화된 메시지가 도출됨으로써, 국제사회의 북핵불용에 대한 단합된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양자 차원에서 핵심 관련국과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각급 협의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더욱 강화하였다. 한 · 미 정상은 2015년 10월 16일 북

핵 · 북한 문제에 특화된 양국 정상 차원의 최초 공동성명인 「2015 북한에 관한 한 · 미 공동성명」을 통해 북핵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다루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통해 한 · 미가 북핵 · 북한 문제에 높은 정책 비중을 두고 강력한 해결 의지를 갖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2015년 9월 2일 한 · 중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이 유엔 안보리 결의들이 충실히 이행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또한 2015년 11월 2일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된 한 · 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등 공동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한 · 일 및 한 · 미 · 일 3국 협력을 평가하고, 향후 이 같은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다자 차원에서도 북핵문제 대응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그리고 2015년 11월 30일 2년 만에 개최된 한 · 러 정상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북핵불용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외교적 방법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여타 국가들과의 양자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고한 지지를 확보하였다. 체코(2015.2.26), 투르크메니스탄(2015.4.13), 불가리아(2015.5.14), 인도(2015.5.18), 우즈베키스탄(2015.5.20), EU(2015.9.15), 프랑스(2015.11.4) 등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불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확고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갔다. 이와 함께 외교장관회담 등 여타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도 북핵불용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의 저변을 확대해 나갔다.

지역협의체 및 국제회의에서도 북핵불용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다수 도출되었다. 3년 반 만에 개최된 한 · 일 · 중 정상회의(2015.11.1)에서 3국 정상은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 내 핵무기 개발에 대한 확고한 반대, 유엔 안보리 결의 충실 이행 의지, 긴장 조성 또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 반대에 대한 공동 인식을 확인하는 등 북핵문제에 있어 종전 3국 정상회의 때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였다. 또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2015.11.22) 의장성명에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결과문서상 최초로 도발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포함되었다. 한 · 비세그라드 그룹(V4: Visegrad Group) 최초로 개최된 정상회의(2015.12.3) 공동성명에서도 북한의 핵 · 미사일 강력 규탄, 핵 폐기와 핵확산금지조약,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안전 조치로의 조속한 복귀 및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가입 촉구, 안보리 결의 이행 촉구 등 강력한 대북 메시지가 포함되었다.

한편 유일하게 북한이 참여하는 역내 안보협의체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외교장관회의(2015.8.6) 의장성명에는 북한을 적시하여 안보리 결의 준수를 독려하고, 비핵화를 강조하는 메시지가 포함되었다. 또한 아세안 외교장관회의(2015.8.4)에서도 이러한 내용의 강력한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아울러 2015년 9월 18일 컨센서스로 채택된 IAEA 총회 북핵 결의는 최초로 북한의 핵물질 생산 직접적 금지를 촉구하였고, 평산 우라늄 광산 활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제사회의 단합된 북핵불용 방침을 재확인하였다.

북핵문제 관련 주요 양자 · 다자 회의 채택 문서

| 일자 | 주요 내용 |
|---|---|
| 2015.2.26 | 한 · 체코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
| 2015.3.13 | 한 · 슬로베니아 외교장관회담 공동언론발표문 |
| 2015.3.21 | 한 · 일 · 중 외교장관회의 공동언론발표문 |
| 2015.4.13 | 한 · 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 공동성명 |
| 2015.5.14 | 한 · 불가리아 정상회담 공동선언 |
| 2015.5.18 | 한 · 인도 정상회담 공동성명 |
| 2015.5.20 | 한 · 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공동선언 |
| 2015.5.22 | MIKTA 외교장관회의 공동언론발표문 |
| 2015.8.5 | 한 · ASEAN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 |
| 2015.8.6 | ASEAN+3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 |
| 2015.8.6 | ARF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 |
| 2015.8.6 | EAS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 |
| 2015.9.2 | 한 · 중 정상회담 결과 |
| 2015.9.11 | 한 · 호 외교 · 국방장관회의(2+2) 공동성명 |
| 2015.9.15 | 한 · EU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 |
| 2015.9.18 | IAEA 총회(외교장관회의) 북핵 결의 |
| 2015.9.29 | MIKTA 외교장관회의 공동언론발표문 |
| 2015.9.29 | CTBT 발효촉진회의(외교장관회의) 최종 선언문 |
| 2015.10.16 | 2015 북한에 관한 한 · 미 공동성명(한 · 미 정상회담) |
| 2015.11.1 | 동북아 평화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한 · 일 · 중 정상회의) |
| 2015.11.4 | 한 · 불 21세기 포괄적 동반자관계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정상회담) |
| 2015.11.5~6 | ASEM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 |
| 2015.11.21 | ASEAN+3 정상회의 의장성명 |
| 2015.11.22 | 한 · ASEAN 정상회의 의장성명 |
| 2015.11.22 | EAS 정상회의 의장성명 |
| 2015.12.3 | 한 · 비세그라드 그룹(V4) 정상회의 공동성명 |

## 2 북한의 비핵화 대화 거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적 인식 형성

북한이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해 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 의미 있는 비핵화 대화가 열려야 한다는 관점을 견지해 왔다.

우리 정부는 의미 있는 비핵화 대화 재개 구상인 코리안 포뮬러(Korean Formula)를 마련하여, 이를 바탕으로 2015년 1~2월 미 · 중 · 일 · 러와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이를 통해 5자 간에 북핵불용, 핵실험 ·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 반대, 안보리 결의 충실 이행에 대한 공동 인식을 확인하였고, 북한의 비핵화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탐색적 대화'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러한 5자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우리는 북한에 2015년 수차례 탐색적 대화를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제안을 비롯해 중 · 러를 포함한 국제사회 모두와 핵 관련 대화를 일절 거부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으면서, 2015년 1월에는 핵실험과 연합훈련 중단 연계를 미국에 제안하고, 2015년 10월에는 미국과 북한 간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등 비핵화 논의의 초점을 흐리려는 시도를 지속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비핵화 프로세스 교착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어,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비핵화 거부를 더욱 비판적으로 인식하였다.

한편 우리 정부는 6자회담 참가국 간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북핵문제 진전에 동력을 주입하기 위하여 6자회담 틀 내 다양한 형식의 소다자 협의를 적극 추진하였다. 한 · 미 · 일 외교장관회의(2015.9.29)뿐만 아니라 최초로 한 · 미 · 일 외

교차관협의회(2015.4.16)를 개최하였으며, 한 · 미 · 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2015.1.28, 5.27, 12.3) 등 각급에서 북핵 · 북한 문제와 관련한 한 · 미 · 일 3국 간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다. 또한 한 · 일 · 중 3국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외교장관회의(2015.3.21)와 정상회의(2015.11.1)를 개최하여 북핵문제 관련 한 · 일 · 중 3국 간 협력을 강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2015년에는 한 · 중, 미 · 중 6자 수석대표 연쇄협의(2015.5.28~29)가 최초로 성사되었고, 9~10월에는 한 · 중(2015.9.2), 미 · 중(2015.9.25), 한 · 미(2015.10.16) 정상회담이 잇달아 개최되어 정상 차원에서 3국 간 북핵문제에 대한 공동 인식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다. 2015년 5월 개최된 동북아시아협력대화 계기에는 한 · 미 · 중 · 일 · 러 당국자 협의(2015.5.28)를 개최하여, 9.19 공동성명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북핵문제 관련국 간 주요 고위급 협의

| 일자 | 주요 내용 |
|---|---|
| 2015.1.28 | 한 · 미 · 일 6자회담 수석대표협의 |
| 2015.1.28 | 한 · 미 6자회담 수석대표협의 |
| 2015.1.28 | 한 · 일 6자회담 수석대표협의 |
| 2015.2.4 | 한 · 중 6자회담 수석대표협의 |
| 2015.2.7 | 한 · 미 외교장관회담 |
| 2015.2.8 | 한 · 러 외교장관회담 |
| 2015.2.11 | 한 · 미 6자회담 수석대표협의 |
| 2015.2.24 | 한 · 러 6자회담 수석대표협의 |
| 2015.3.16 | 한 · 일 6자회담 수석대표협의 |
| 2015.3.21 | 한 · 일 · 중 외교장관회의 |
| 2015.3.21 | 한 · 중 외교장관회담 |
| 2015.3.21 | 한 · 일 외교장관회담 |
| 2015.4.9 | 한 · 미 6자회담 수석대표협의 |
| 2015.4.21 | 한 · 미 6자회담 수석대표협의 |
| 2015.4.27 | 한 · 미 6자회담 차석대표협의 |
| 2015.5.4 | 한 · 미 6자회담 수석대표협의 |
| 2015.5.6 | 한 · 중 6자회담 수석대표협의 |
| 2015.5.18 | 한 · 미 외교장관회담 |
| 2015.5.26 | 한 · 미 6자회담 수석대표협의 |
| 2015.5.26 | 한 · 일 6자회담 수석대표협의 |
| 2015.5.27 | 한 · 미 · 일 6자회담 수석대표협의 |
| 2015.5.28 | 한 · 중 6자회담 수석대표협의 |
| 2015.5.28 | 한 · 미 · 중 · 일 · 러 5자 간 당국자 협의(6자회담 차석대표 포함) |
| 2015.5.29 | 한 · 미 6자회담 수석대표협의 |
| 2015.6.21 | 한 · 일 외교장관회담 |
| 2015.6.29 | 한 · 미 6자회담 수석대표협의 |
| 2015.7.23 | 한 · 중 6자회담 수석대표협의 |
| 2015.7.27 | 한 · 미 6자회담 차석대표협의 |
| 2015.8.5 | 한 · 중 외교장관회담 |
| 2015.8.5 | 한 · 러 외교장관회담 |
| 2015.8.6 | 한 · 일 외교장관회담 |
| 2015.8.21 | 한 · 중 6자회담 수석대표협의 |
| 2015.8.31 | 한 · 미 외교장관회담 |
| 2015.9.1 | 한 · 중 6자회담 수석대표협의 |
| 2015.9.2 | 한 · 중 정상회담 |
| 2015.9.7 | 한 · 중 6자회담 차석대표협의 |

| | |
|---|---|
| 2015.9.16 | 한 · 미 6자회담 수석대표협의 |
| 2015.9.18 | 한 · 중 6자회담 차석대표협의 |
| 2015.9.18 | 한 · 러 6자회담 차석대표협의 |
| 2015.9.25 | 한 · 미 6자회담 수석대표협의 |
| 2015.9.30 | 한 · 일 외교장관회담 |
| 2015.10.16 | 한 · 미 정상회담 |
| 2015.10.27 | 한 · 미 6자회담 수석대표협의 |
| 2015.10.27 | 한 · 일 6자회담 수석대표협의 |
| 2015.10.31 | 한 · 중 정상회담 |
| 2015.11.1 | 한 · 일 · 중 정상회의 |
| 2015.11.1 | 한 · 일 외교장관회담 |
| 2015.11.2 | 한 · 일 정상회담 |
| 2015.11.21 | 한 · 중 외교장관회담 |
| 2015.11.24 | 한 · 중 6자회담 수석대표협의 |
| 2015.11.30 | 한 · 러 정상회담 |
| 2015.12.2 | 한 · 일 6자회담 수석대표협의 |
| 2015.12.3 | 한 · 미 · 일 6자회담 수석대표협의 |
| 2015.12.3 | 한 · 미 6자회담 수석대표협의 |
| 2015.12.28 | 한 · 일 외교장관회담 |

## 3 북한 도발 대응 및 압박 강화 노력

북한은 2015년 수차례에 걸쳐 소위 '위성(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로 위협했다. 5월 3일 김정은이 인공위성 발사를 공언한 데 이어 9월 14일에는 국가우주개발 국장이 위성 발사 계획을 언급하는 등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고조되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여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양자 및 안보리 차원에서의 대응 체제를 마련하였다. 한 · 미는 정상회담(2015.10.16) 공동성명을 통해 '위성'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상시적인 위반'임을 명시하였다. 아울러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여 한 · 중 정상회담(2015.9.2)에서 시진핑 주석은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전 경고를 하였다. 일본과는 한 · 미 · 일, 한 · 일 · 중 협력 등을 통해 북한 도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갔으며, 러시아와는 한 · 러 외교장관회담 때(2015.8.5) 북한의 추가 도발 저지 및 북한 비핵화의 진전을 위해 긴밀하게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북한은 수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스커드미사일 발사(2015.3.2)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사출시험(2015.5.8) 등을 통해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에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북한 제재위 앞으로 서한을 발송하여 북한의 미사일 및 로켓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임을 지적하고 북한 제재위원회의 조사를 요청함으로써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켰다.

한편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방국들과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긴밀히 협의하였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무기 거래를 통해 북한을 간접 지원하고 있는 외국인 3명과 외국 기관 4곳을 최초로 우리의 양자 금융 제재 대상으로 지정(2015.6.26)하였다.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우방국들도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양자 제재를 강

화하였다. 특히 미국은 인권 · 사이버 분야로 대북 제재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와 더불어 우리 정부는 아프리카, 동남아, 중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안보리 제재 이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외교 노력도 경주하였다.

제 3 절

# 한 · 미 전략동맹의 심화 및 발전

## 1 한 · 미 포괄적 전략동맹의 심화 · 발전

한 · 미 양국은 공동의 가치와 신뢰를 바탕으로 2015년 한 해 동안 정상회담, 외교장관회담, 차관급 회담 등 다층적 협의 채널을 적극 가동, 한 · 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착실히 심화 · 발전시켰다. 양국은 동맹, 한반도, 동북아, 글로벌 파트너십 등 제반 협력 분야에서 다양하고 내실 있는 성과를 높이는 한편 우주, 사이버, 보건안보 등 분야에서 협력의 새로운 지평(New Frontier)을 개척해 나갔다.

한 · 미 양국은 42년 만에 신(新)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는 등 민감 현안을 창의적이고 호혜적인 방식으로 해결함으로써 동맹의 현대화 노력을 계속해 나갔다. 또한 한 · 미 양국은 빈틈없는 대북 공조를 바탕으로 8월 지뢰 · 포격 도발 등 북한의 각종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 · 안정에 기여하였

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 · 미 관계와 한 · 중 관계의 조화로운 발전 도모에 미 측의 이해 · 지지를 심화시키고, 한 · 일 관계 개선을 위한 미 측의 건설적 역할 및 기여를 확보해 나가는 등, 급변하는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 · 미 동맹을 기반으로 능동적인 대주변국 외교를 전개하였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미국 방문은 2015년 한 · 미 관계 발전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월 13~16일 미국을 방문해 10월 16일 버락 오바마(Barack H. Obama) 대통령과 취임 후 네 번째 정상회담을 열고 '강력하고, 진화하는, 역동적인' 한 · 미 동맹을 재확인하였다. 2013년도 박근혜 대통령 방미, 2014년도 오바마 대통령 방한에 이은 2015년도 방미로 한 · 미 양국 정상의 상호방문은 사실상 연례화되었다. 그간 축적된 양국 정상 간 긴밀한 신뢰 및 유대는 2015년 한 · 미 관계를 한층 더 높은 단계로 성숙시켜 나가기 위한 양국의 적극적인 노력의 중요한 토대를 이루었다.


한 · 미 정상회담(2015.10.16, 워싱턴)


한 · 미 정상 공동기자회견(2015.10.16, 워싱턴)

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은 미국의 확고한 대한방위공약을 재확인하고, 외교 · 국방 2+2 회담 및 한 · 미 안보협의회 정례화에 합의하는 한편, 경제 · 원자력 고위급 협의 틀을 구축하는 등 한 · 미 안보 · 경제 동맹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또한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한 고위급 전략 협의를 심화해 나가기로 합의하는 등 북핵 · 북한 문제 관련 전략적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정상 차원에서는 최초로 북핵 · 북한 문제에 특화된 「2015 북한에 관한 한 · 미 공동성명」을 채택함으로써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였다.

이와 더불어 오바마 대통령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환영 의지를 표명하고, 한 · 일 · 중 3국 정상회담 개최 노력을 평가함으로써 동북아 평화 및 번영을 위한 우리의 양자 · 소다자 · 다자 협력 추진 구상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였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비확산, 대테러 및 개발협력 등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및 우주, 사이버, 보건 안보 등 새로운 지평에서의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문정왕후 · 현종 어보 두 점을 조기 환수하고 양국 간 교육 파트너십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는 등 양국 국민 간 유대 강화를 위한 노력 역시 지속키로 합의하였다. 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된 「한 · 미 관계 현황 공동 설명서(Joint Fact Sheet)」는 이러한 제반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현황 및 성과를 총 정리하고, 향후 협력 추진의 청사진을 잘 제시해 주고 있다.

10월 정상 방미는 아시아 정상으로서는 최초로 부통령 관저에 초청받는 등 미 측의 각별한 예우와 환대 속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2015년도 정상 방미는 본래 6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메르스 창궐로 국내에서 집중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연기되었다. 정부는 방미 연기를 전후로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하였고, 6월 10일 방미 연기 발표 직후인 6월 12일 오바마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방미 연기 결정의 충분한 이해 및 지지 의견을 표명하며 상호 편리한 가장 이른 시기에 방미를 재추

진하자고 하였다. 이어서 6월 17일 미 하원의원 38명은 방미 연기의 이해 및 지지 의견을 표명하는 연명서한을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송부하였다.

한 · 미 양국은 2015년 정상급 외교뿐 아니라 외교장관 회담을 비롯한 고위급 외교도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2015년 1년간 존 케리(John F. Kerry) 미 국무장관과의 총 3차례 회담에서 양국 외교 수장 간 개인적인 유대 강화는 물론이고 실질협력을 위한 정책 공조 역시 강화하였다.

2월 7일 뮌헨 안보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2015년도 첫 한 · 미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한 · 미 양국이 한 해 동안 추진해야 할 협력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북핵 · 북한 문제, 동북아 역내 불안 및 글로벌 도전 대응 등에 양자 및 다자 차원의 정책 조율과 협력을 계속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 자리에서 윤병세 장관은 2015년도가 종전 및 광복 70주년, 한 · 일 국교정상화 50주년 등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큰 해임을 감안하여 한 · 일 관계 등 양자 차원은 물론이고 한 · 미 · 일, 한 · 일 · 중 등 소다자 협력,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역내 협력 강화를 위한 우리의 적극적 노력을 설명하였고, 케리 장관은 이에 큰 환영의 뜻을 표명하면서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3개월 만에 케리 국무장관이 방한해 5월 18일 두 번째 한 · 미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되었다. 양국 장관은 핵, 미사일, 재래식 수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되고 있는 북한 도발 및 북한 내부 정세의 유동성과 불확실성에 주목하며 한 · 미 양국 간 고위급 대북 정책 공조와 연합 억지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지속 가능한 동북아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역내 국가 간 올바른 역사 인식에 기초한 협력 필요성도 논의하였다.

3개월 뒤인 8월 31일 미국 앵커리지에서 북극외교장관회의(GLACIER)를 계기로 개최된 세 번째 한 · 미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8월 25일 남 · 북 합의 이후 한반도 상황 및 향후 대응방안, 동북아 정세 및 글로벌 파트너십 등을 협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 · 미 양국이 8월 북한 지뢰 · 포격 도발 대응 및 8월 25일 남 · 북 공동발표문 합의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군사 및 외교적 차원에서 긴밀한 공조를 견지해 온 것을 평가하였고, 한반도 평화 · 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역내 이해관계국 간의 다양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국제평화유지, 기후변화, 개발협력 및 폭력적 극단주의 등 범세계적 문제에 대응하는 데도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케리 장관은 이 자리에서 윤병세 장관이 비서구 · 아시아 국가 외교장관으로는 유일하게 북극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것도 한 · 미 간 글로벌 차원의 공조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한 · 미 외교장관회담(2015.5.18, 서울)


한 · 미 공동기자회견(2015.5.18, 서울)

이처럼 10월 정상 방미에 앞서 각각 3개월 간격으로 이루어진 3차례의 외교장관 회담은 2015년도 한 · 미 정상외교가 내실 있는 성과를 거양할 수 있게끔 하는 튼실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윤병세 외교장관은 6월 14~16일 미국을 방문해 신(新) 한 · 미 원자력

협력협정 정식 서명식에 참석하였으며, 수전 라이스(Susan Rice)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하고 정상 방미 시기 재조정 문제를 포함한 한 · 미 현안에 관한 의견을 심도 있게 교환하였다.

한편 9월 29일 윤병세 외교장관은 유엔총회 및 개발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케리 미 국무장관 및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한 · 미 · 일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북한 도발 억지 및 향후 대응 방안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3국 간 공조 방안을 중점 협의하고, 범세계적 문제 해결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3국 간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 · 미 · 일 3국 외교장관회담(2015.9.29, 뉴욕)


한 · 미 외교차관 회담(2015.2.9, 서울)

이 밖에도 한 · 미 양국 정부는 주요 정책 현안 및 관심사에 대한 다층적 협의체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하였다.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은 안토니 블링큰(Antony Blinken) 국무부 부장관과 3차례 외교차관회담(2.9, 4.17, 10.6)을 열고 북핵 · 북한 문제와 관련한 긴밀한 공조를 확인하는 한편, 동아시아 지역 정세 및 범세계 문제도 심도 있는 협의를 하였다. 또한, 4월 16일 조태용 제1차관은 블링큰 부장관 및 사이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3국 외교차관 간 협의로서는 최초인 한 · 미 · 일 3국 외교차관협의회를 개최해 북핵 · 북한 문제, 아태 지역 정세 및 범세계 문제 등 다양한 공동 관심사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편 11월 20일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캐서린 노벨리(Catherine Novelli) 국무부 경제차관과 제1차 한 · 미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공동주재해 보건안보, 북극, 해양 등 'New Frontier' 이슈에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개발협력, 디지털 경제 등 글로벌 파트너십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하였다.

아울러 웬디 셔먼(Wendy Sherman) 국무부 정무차관, 대니얼 러셀(Daniel Russel)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성 김(Sung Kim)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등 한 · 미 관계 주요 인사들이 방한하여 양국 고위 당국자 간 정책 협의를 수시 개최하였다.

비록 2015년은 3월 마크 리퍼트(Mark Lippert) 주한미국대사가 피습되는 등 다사다난한 해였으나 한 · 미 양국 정상 및 기타 고위급에서부터 실무급에 이르기까지 긴밀히 소통 · 협의 · 공조한 결과 동맹, 한반도, 동북아 및 범세계 차원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10월 정상 방미 등을 계기로 오바마 대통령, 케리 장관을 포함한 다양한 미 행정부 인사들은 한 · 미 관계를 역대 가장 강력한 상태로 평가하였고,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10.28)도 한 · 미 관계를 "양국 동맹 수립 이래 가장 굳건한 상태(most robust state)"로 표현하였다. 이처럼 한 · 미 양국은 급변하는 동북아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굳건한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고 동북아 지역 평화 · 안정을 위한 핵심축(linchpin)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갔다. 한편으로는 세계의 평화 · 번영 달성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화하면서 협력의 새로운 지평(New Frontier)을 넓혀 나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 2015년 한 · 미 정상회담, 외교장관회담 및 한 · 미 · 일 외교장관회담

**한 · 미 정상회담**

| 일시 | 개최지 | 주요 내용 |
|---|---|---|
| 2015.10.16 | 워싱턴 | 박근혜 대통령 방미(10.13~16) 계기 한 · 미 정상회담 |

**한 · 미 / 한 · 미 · 일 외교장관회담**

| 일시 | 개최지 | 계기 |
|---|---|---|
| 2015.2.7 | 뮌헨 | 뮌헨 안보회의 참석 계기 한 · 미 외교장관회담 |
| 2015.5.18 | 서울 | Kerry 미 국무장관 방한(5.17~18) 계기 한 · 미 외교장관회담 |
| 2015.8.31 | 앵커리지 | 북극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 한 · 미 외교장관회담 |
| 2015.9.29 | 뉴욕 | 유엔총회 참석 계기 한 · 미 · 일 외교장관회담 |

## 2 한 · 미 전략동맹의 저변 공고화

한 · 미 양국은 정부 차원의 협력과 더불어 미국 연방의회, 주정부 및 주의회 인사, 학계 · 언론계 등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활발한 인적 교류를 시행하고 있다. 양국 간 인적 교류의 활성화는 한 · 미 간 다층적 · 복합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양국 관계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연방의회와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의원 방한 초청사업(CMEP: Congressional Member Exchange Program)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 마이크 켈리(Mike Kelly) 하원의원, 아미 베라(Ami Bera) 하원의원 등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아울러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하원 민주당 대표 등 하원 의원단, 찰스 랭걸(Charles Rangel) 하원의원, 마이크 로저스(Mike Rogers) 하원의원(하원 군사위원회 전략군소위원장) 등 하원 군사위 소속 의원단, 코리 가드너(Cory Gardner) 상원의원(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 등 다수의 연방의원들이 방한하였다.


대통령, 가드너 상원 동아태소위원장 접견
(2015.8.19, 서울)

이들 연방의원의 방한은 한반도 및 동북아 외교 · 안보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우리 정부의 외교 · 안보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를 통해 한 · 미 동맹 및 우리 정부 정책에 대한 미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 내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우리 정부는 코리아 코커스(Korea Caucus) 소속 연방 상 · 하원 의원들의 보좌관도 초청하는 등 미 의회 구성원들이 한 · 미 동맹의 굳건함과 그 중요성을 좀 더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015년에는 우리 국회의원들의 미국 방문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1월에는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하였다. 3월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워싱턴을 방문하여 존 베이너(John Boehner) 하원의장 등 미 의회 인사들과 면담했으며, 4월에는 황진하 의원 등 국회의원 3명이 한 · 미 · 일 의원회의(TLEP: Trilateral Legislative Exchange Program) 참석차 워싱턴을 방문하였다. 5월에는 이병석 의원 등 한 · 미 의원외교협의회 소속 의원단이 미국을 방문하여 에드 로이스(Ed Royce) 하원 외교위원장 등과 면담하였고, 7월에는 김무성 대표 등 국회의원 11명을 포함한 새누리당 대표단이 방미해 존 매케인(John McCain) 상원의원 등과 면담하는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하여 양국 의회 인

사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양국 의회 간 교류 ·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 정부는 미 의회 내 한 · 미 동맹, 일본 과거사 문제 등 주요 사안 관련 우리 정책에 대한 지지를 획득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첫째, 미 국방수권법안 내 합동성명서(JES)에 한 · 미 동맹, 통일비전 지지 문안이 포함(10.7)되었고, 박근혜 대통령 방미 환영 상원 결의가 채택(10.8)되는 등 의회 차원의 한 · 미 동맹 지지가 다수 표명되었다. 둘째, 12월 28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한 · 일 간 합의 직후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대표,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 등 다수 의원들이 이 합의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12.29)하는 등 우리 정부의 일본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견해에 미 의회 내 확고한 지지가 이어졌다. 셋째, 미 의회 내 한국 관련 상 · 하원 의원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의 회원이 2015년 한 해 동안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미 의회 내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확대되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미국 내 주정부 · 주의회 인사와의 교류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였다. 2015년에는 에드워드 칼보(Edward Calvo) 괌 주지사, 래리 호건(Larry Hogan) 메릴랜드 주지사, 제이 인슬리(Jay Inslee) 워싱턴 주지사, 스티브 불럭(Steve Bullock) 몬태나 주지사, 데이비드 이게(David Ige) 하와이 주지사 등 5명의 현직 주지사가 방한하여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인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이들 주지사 외에 스테이시 에이브럼스(Stacy Abrams) 조지아주 하원 민주당 대표, 크리스틴 라도뇨(Christine Radogno) 일리노이주 상원 공화당 대표 등 주 의회 주요 인사들이 주정부 · 주의회 인사 초청 사업을 통해 한국을 방문하였다. 미국 내 다양한 지역 인사들의 방한을 통해 지방정부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더욱 다양한 차원에서 한 · 미 동맹의 기반을 공고화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미국 내 여론 주도층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전직 인사, 학계 · 싱크탱크 인사들과의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빌 번스(Bill Burns) 카네기국제평화재단 회장(전 미 국무부 부장관), 제인 하먼(Jane Harman) 우드로윌슨센터 회장, 리처드 하스(Richard Haass) 회장 등 외교협회(CFR) 대표단, 존 햄리(John Hamre) 회장 등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대표단, 이보 달더(Ivo Daalder) 회장 등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 대표단, 토머스 허버드(Thomas Hubbard) Korea Society 이사장 등 주요 학계 · 싱크탱크 인사들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특히 번스 카네기재단 회장의 방한은 카네기재단 회장으로서는 20년 만의 방한으로서 미국 내 여론 주도층과의 인적 네트워크 다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외교장관, 번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회장 접견 (2015.6.30, 서울)

이 밖에도 우리 정부는 한 · 미 전략동맹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양국 간 인적 교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특히 평화봉사단 재방한 사업(2009~2013)의 후속조치로서, 과거 한국에서 근무한 미 평화봉사단원을 주축으로 구성된 '프렌즈 오브 코리아(FoK: Friends of Korea)'와 연계하여 미국 내 다양한 지역별로 맞춤형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하였다. 우리 정부가 한국에서 봉사하고 헌신했던 인사들에게 보답하고자 마련한 기회를 통해 양국 국민은 우의를 다질 수 있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내 유력 · 신진 학자 및 언론계 전문가 초청 등 다

양한 방식을 통해 체계적 · 전략적 '정책중심' 대미 공공외교를 추진하여 우리 정부의 정책 및 입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해 한 · 미 전략동맹의 저변을 공고화해 나갈 계획이다.

## 3 한 · 미 연합 방위 태세 강화와 안보 협력의 지평 확대

중 ·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및 핵 · 미사일 기술 고도화 등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한 · 미 양국은 물샐틈없는 공조 체제를 기반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및 대북억제력을 유지하고 있다. 한 · 미 양국은 2015년 8월 북한의 DMZ 목함지뢰 도발 및 포격 도발에 긴밀하고 단호하게 공동 대응하여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였다. 한 · 미 양국은 최상의 동맹으로서 굳건한 대응 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방산, 생물 방어, 사이버, 우주 등 여러 분야에서 동맹의 외연을 확장하면서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 · 안정을 위한 핵심축 역할을 넘어 명실상부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미국은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 억제를 제고한다는 방위 공약을 지속적으로 재확인하고 있다. 특히 2015년 4월에 개최된 제7차 한 · 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에서는 점증하는 북한의 핵 · 미사일 위협에 한 · 미 양국의 억제 및 통합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기존의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와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를 통합하여 한 · 미 억제전략위원회(DSC: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를 신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 9월 제8차 KIDD 계기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DSC에서 한 · 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 및 침략, 특히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사용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 시 동맹의 방어 및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제47차 한 · 미 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한민구 국방장관과 애슈턴 카터(Ashton Carter) 미 국방장관은 북한 핵 ·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 및 원칙(4D 작전 개념)'의 이행 지침을 승인하였다. 북한 미사일 위협을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d)를 하기 위한 4D 작전 개념을 구체화한 이행 지침의 승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한 · 미 양국의 대응 능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로 평가되고 있다.


외교장관, 오산 공군기지 방문(2015.1.6)

또한 제47차 SCM 회의 시 양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에 서명하고, 적정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도록 이 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그 외에도 양국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사업이 적시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며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 · 미 양국은 방위산업기술 관련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제47차 SCM 회의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양국 간 방산 기술 전략 · 협력 관련 협조 강화를 위해 전략적 수준의 외교 · 국방 2+2 방산기술전략 · 협력체(DTSCG: Defense

Technology Strategy and Cooperation Group) 신설에 합의하였다.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이 고위급 협력체를 통해 양측은 방산기술과 관련하여 전략과 정책 차원에서 더욱 심도 있는 협의와 협력을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양국은 새로운 분야에서 한 · 미 안보 협력의 지평을 지속 개척해 나가고 있다. 특히 2015년 한 · 미 생물방어연습(Able Response)의 경우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과 최초로 연계 실시되어 범국가적 · 초국가적 생물방어 협력의 모범 사례를 습득하고 생물방어 관련 협력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이 연습은 한반도 내에서 발생 가능한 자연 발생적 또는 의도적 생물 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 능력을 지속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 외에도 양국은 우주 · 사이버 등 분야에서도 안보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한 · 미 동맹은 역내 안정과 번영을 유지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상태로 평가되고 있다. 한 · 미 양국은 앞으로도 공고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여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한편, 공통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을 두고 지역 · 글로벌 차원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 4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운영 개선의 지속적 추진

정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의 원활한 운영과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 방위를 위해 파견되어 있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근무 여건을 확보하여 한 · 미 연합 방위력 증강에 기여하는 동시에, 미군 주둔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2015년 정부는 ▲탄저균 배달사고 ▲포천 도비탄 사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문제 ▲주한미군 범죄 예방 등 주요 사안별 한 · 미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극적 ·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를 적극 운영하여 미군 관련 우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우선 정부는 제195차 SOFA 합동위원회(2015.7.15) 및 제196차 SOFA 합동위원회(2015.12.17)에서는 탄저균 배달사고 대응을 위하여 구성된 한 · 미 생물방어협력 관련 합동실무단(Joint Working Group)이 마련한 '사균화 처리된 특정 생물학 검사용 샘플 반입 절차서'를 추인함으로써 국내법 규제 대상이 아닌 검사용 샘플 반입도 주한미군이 우리 측에 통보토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보건당국을 통한 한 · 미 공동평가를 규정하는 등 SOFA 질병예방통제분과위(우리 측: 질병관리본부)를 통한 더욱 체계적이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공식화하였다.



제195차 SOFA 합동위원회(2015.7.15, 서울)

또한 정부는 포천 미군 사격장 주변 도비탄 사건 빈발로 주민들의 안전에 불안감과 우려가 큰 상황임을 강조하며 주한미군 측의 정확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조치가 긴요함을 촉구하였다. 이에 주한미군은 그간 미 측의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설명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과 관련하여 한 · 미 양측은 주한미군 기지 평택 이전과 연계된 감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력을 계속해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들의 퇴직금 제도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기 위해 상호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한 · 미 양국은 그간 미군 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함에 따라 미군 범죄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높게 평가하고 향후에도 미군 범죄 근절을 위한 한 · 미 간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부는 또한 2013년 4월 개소한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를 통해 ▲주한미군의 공무 중 또는 비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교통사고, 농작물 피해 등)의 민 · 형사상 처리절차, SOFA 전반에 대한 안내 등 맞춤형 대국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미군기지 인근 지자체 · 일선 경찰서 등을 방문하여 현장 민원을 청취하는 등 국민에게 다가가는 SOFA 운영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

정부는 앞으로도 SOFA의 성실한 이행과 현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 체제를 공고화하는 한편, 한 · 미 간 SOFA 합동위원회, 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SOFA 운영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적극적 · 선제적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예정이다.

## 〈한 · 미 원자력협정 전면 개정〉
### 한 · 미 간 전략적 원자력협력 확대

한 · 미 양국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년여 간의 집중적 협상 끝에 신(新) 한 · 미 원자력협정을 타결하고 11월 25일 발효시킴으로써 한 · 미 간 전략적 원자력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다. 40여 년 전 체결된 기존 한 · 미 원자력협정(1973.3 발효)이 선진적 · 호혜적 신 협정으로 전면 대체된 것이다.


장관–Moniz 미 에너지부 장관 간
신 한 · 미 원자력협정 서명식(2015.6.15)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 등 우리 정부의 3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게 되었다. 특히 한 · 미 양국은 장래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및 저농축을 추진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였고, 그간 전량 수입해 온 암진단용 방사성동위원소를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도 기여하게 되었다.

또한 협정 전문에 이례적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확인하는 동시에 원자력협력의 확대에 주권 침해가 없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하는

등 우리 원자력 활동의 자율성을 중첩적으로 보장하는 선진적 협력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 구분 | 추진분야 | 현행 협정 | 신 협정 |
|---|---|---|---|
| 사용후 핵연료 관리 | 조사후시험/전해환원 | 미 측 동의 필요 | 현존시설 전면허용 |
| | 장래 파이로 | 미 측 동의 필요 | 고위급위원회를 통한 합의 시 추진 가능 |
| | 위탁재처리 | 없음 | 영국, 프랑스 등에 위탁재처리 가능 |
| | 기술협력 | 정보교환에 국한 | 저장 · 수송 · 처분 기술협력 확보 |
| 원전수출 증진 | 재이전(제3국 수출) | 미 측 건별 동의 | 한 · 미 양국과 협정을 체결한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 별도 동의 불요 |
| | 수출입 인허가 | 없음 | 신속화 규정 |
| 원전연료 공급 | 저농축(20% 미만) | 없음 | 고위급위원회를 통한 합의 시 추진 가능 |
| | 연료 공급지원 | 분야 및 제공규모 한정 | 지원 조항 신설 |
| 기타 | 고위급위원회 | 없음 | 신설(4개 실무그룹 설치) |
| | 의료용 동위원소생산 | 없음 | 전면 허용 |
| | 비확산 규범 | 미비 | 최신 규범 반영 |
| | 협정 유효기간 | 41년 | 20년으로 단축 |

이번 한 · 미원자력협정 개정은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한 · 미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 또 하나의 사례로, 신 한 · 미 원자력협정이 ▲한 · 미상호방위조약 ▲한 · 미 FTA에 이어 한 · 미 동맹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핵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한 · 미 양국은 신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신 협정 이행을 위한 첫 번째 조치로서 차관급 고위급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2016년 상반기에 개최하여 양국 간 전략적 · 미래지향적 협력의 청사진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다.

### 한 · 미 원자력 협력



제 4 절

#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 심화

## 1 한 · 일 관계



한 · 일 정상회담(2015.11.2, 서울)

일본은 가치와 이해를 공유하는 소중한 이웃이자 동북아 지역은 물론이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우리의 동반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래 올바른 역사 인식을 기초로 한 · 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기조로 일본과의 관계 발전을 도모해 왔다.

특히 한 · 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우리 정부는 양국 관계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경주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5월 이후 3년 반 만에 우리의 주도적 노력으로 개최된 한 · 일 · 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한 · 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11월) 솔직한 의견 교환을 통해 한 · 일 관계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특히 양국 정상은 올해가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전환점에 해당되는 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양국 관계에서 난제 중 난제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가능한 한 조기에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도록 지시하였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취임 후 첫 방일(6월)을 포함하여 6차례 개최된 한 · 일 외교장관회담과 3차례의 통화로 한 · 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진지하게 모색하였다. 윤병세 외교장관의 첫 방일 계기, 양국 간 중요 현안이었던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문제 관련 큰 틀에서 합의가 도출되었으며,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우리의 정당한 우려가 충실히 반영되는 형태로 등재가 결정되었다(7월). 또한 한 · 일 외교차관협의(4월) 개최 등 양국 외교당국 간 대화를 계속하면서 역사 인식 문제 및 과거사 현안 해결을 위한 양국 간 접점 모색 노력도 계속하였다.

그럼에도 반복되는 일부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역사 퇴행 행보는 한 · 일 관계 진전에 난관을 조성하였다. 일본의 일부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은 과거 제국주의 침탈 역사의 상징으로, 침략전쟁의 역사를 미화하고 있는 야스쿠니신사에 공물 봉납 및 참배(4, 8, 10월)를 하였다. 또한 시마네현 '독도의 날(2.22)' 행사에 중앙정부 고위급 인사를 참석시키고,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4월)시킴으로써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도발을 감행하기도 하였다.

우리 정부는 한 · 일 관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일본의 역사 인식 및 과거사 문제의 올바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양국 간

과거사 핵심 현안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한 · 일 양자 간 협의는 물론이고 유엔총회, 인권이사회 등 국제무대에서도 한 · 일 양자 차원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여성인권 문제라는 국제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9월 29일 제7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혹독한 여성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들이 이제 몇 분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분들이 살아계실 때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해결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11월 2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 · 일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관계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이 위안부 문제임을 지적하고, 조속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국 정상이 '가능한 한 조기에 위안부 문제 타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에 합의했다. 이후 2개월간의 집중적인 협의 끝에 12월 28일 한 · 일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타결하고, 양국 외교장관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합의사항을 발표하였다.


한 · 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2015.12.28, 서울)

## 2015.12.28 합의 내용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대신 발표 내용**

①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

②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前 위안부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함. 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前 위안부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일한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前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함.

③ 일본 정부는 이상을 표명함과 함께, 이상 말씀드린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 · 비판하는 것을 자제함.

또한, 앞서 말씀드린 예산 조치에 대해서는 대략 10억 엔 정도를 상정하고 있음. 이상 말씀드린 것은 일한 양 정상의 지시에 따라 협의를 진행해 온 결과이며, 이로 인해 일한관계가 신시대에 돌입하게 될 것을 확신함.

**윤병세 외교부 장관 발표 내용**

①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앞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함.

②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 · 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

③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 · 비판을 자제함.

이번 합의는 얼마 남지 않은 피해자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 이 문제를 풀어 그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피해자들의 요구와 바람이 가능한 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에 최선의 노

력을 다한 결과이며 ▲일본 정부가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하고 '도의적' 표현 등 어떠한 수식어도 없이 정부 책임을 최초로 분명히 표명하였고 ▲아베 신조 일본 내각총리대신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였으며 ▲일본 정부 차원에서 10억 엔 수준의 예산을 출연하여 우리 정부가 설립 · 운영할 재단을 통해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라는 포괄적 사업을 시행하도록 한 데 그 의의가 있다.

한편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 및 도발에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등을 통해 단호하고 엄중한 우리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와 더불어 독도의 역사적 진실을 알리는 다국어 홍보 동영상에 12개 언어의 자막을 추가로 삽입하고, 독도 홈페이지에 독도 근 · 현대 자료 DB(국 · 영문)를 추가 개설하는 등 일본 측 주장의 허구성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려 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일본 정부는 「미 · 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4월)하여 미 · 일 양국 간 방위협력 토대를 마련하고, 자위대의 해외 파견 및 임무와 역할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국제평화지원법안과 평화안전법제정비법안 등 소위 '안보법안'을 통과(9월)시킴으로써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4, 9월)을 통해 「미 · 일 방위협력지침」이나 소위 '안보법안'이 우리의 주권에 완전한 존중을 명확히 한 것을 확인하고, 일본의 방위안보 정책이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일본에서 신오쿠보 등 도쿄 시내와 오사카 시내 한인 거주 구역을 중심으로 반한시위 및 혐오발언(hate speech)이 확산되어 일본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하였다. 우리 정부는 다양한 외교 경로를 통해 혐오발언이 확산되지 않도록 일본 측이 조속히 법 제도상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도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총무회장(2월),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10월) 등과 접견 시 우리 동포들의 안전과 생업이 위협받지 않도록 근원적인 해결책으로서 제도 구축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하였다. 일본 측은 일부 국가 및 민족을 배제하려는 혐오발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일본 내 법무성을 중심으로 계몽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의회 내 혐오발언 규제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일부 긍정적 움직임도 있었다.

한 · 일 일반 국민 간 상호 교류는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경제 · 통상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은 상호 제3위 교역 상대국으로서 양국 간 교역액은 71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인적 교류 분야에서는 2015년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이 엔화가치 하락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로 전년보다 19.4% 감소한 183만 8,000명을 기록하였으나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역대 최대치인 400만 명에 달하였다.

특히 양국 정부가 지정한 「한 · 일 국교정상화 50주년」으로서 '함께 열어요 새로운 미래를'이라는 표어 아래 한 · 일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문화 · 인적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사업도 적극 전개되었다. 2015년 한 해 동안 문화, 예술, 학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정부 및 민간 주도로 총 410여 건 이상의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되었고, 양국 정부 주도 기념사업으로는 ▲국교정



상화 50주년 기념리셉션(6.22, 서울/도쿄) ▲공동 학술회의(6.17~19, 제주) ▲한 · 일 축제한마당(9.19~20, 서울/9.26~27, 도쿄) 행사 등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특히 6월 22일 상대국 수도에서 각각 개최된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에는 양국 정상이 교차 참석하여 새로운 협력과 공영의 미래를 향한 전환점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도 제38차 한 · 일/일 · 한 의원연맹 합동총회가 도쿄에서 개최되어(7월) 방일한 한 · 일 의원연맹 대표단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예방하였고, 박근혜 대통령도 자민당 총무회장(2월), 일 · 한의원연맹 회장(6월), 민주당 대표(8월) 및 공명당 대표(10월) 등 방한한 일본 주요 정계 인사들을 접견하는 등 의회 차원의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제23차 한 · 일포럼(8월) 및 제51회 한 · 일/일 · 한협력위원회 합동총회(11월) 등 양국 여론주도층 인사 간의 민간 교류도 활성화되었으며, 양국 경제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한 제47회 한 · 일/일 · 한 경제인회의(5월)에서는 새로운 50년을 향한 동반성장 · 공동번영의 시대를 위한 양국 간 경제교류 촉진방안을 논의하는 등 양국 경제계 간 교류 흐름도 지속되었다. 또한 한 · 일 외교부가 추진하는 양국 언론인 교류도 계속되어 일본기자단 방한(6.15~20)과 우리 기자단 방일(11.29~12.6)도 시행되었다.

### 한 · 일 정상회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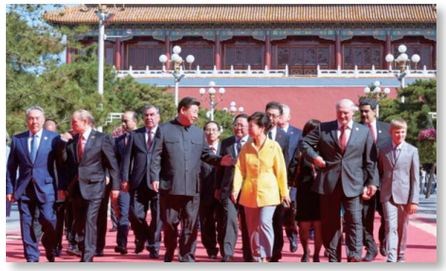
| 일자 | 주요 내용 |
|---|---|
| 2015.11.2 | 한 · 일 · 중 정상회의 계기 한 · 일 정상회담(서울) |

### 한 · 일 외교장관회담

| 일자 | 주요 내용 |
|---|---|
| 2015.3.21 | 기시다 후미오 외무대신 한 · 일 · 중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방한 계기 한 · 일 외교장관회담(서울) |
| 2015.6.21 | 윤병세 외교장관 방일 계기 한 · 일 외교장관회담(도쿄) |
| 2015.8.6 | ARF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 · 일 외교장관회담(쿠알라룸푸르) |
| 2015.9.30 | 제70차 유엔총회 계기 한 · 일 외교장관회담(뉴욕) |
| 2015.11.1 | 기시다 후미오 외무대신 한 · 일 · 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 계기 한 · 일 외교장관회담(서울) |
| 2015.12.28 | 기시다 후미오 외무대신 방한 계기 한 · 일 외교장관회담(서울) |

## 2 한 · 중 관계

2015년 한 · 중 양국은 한 · 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진전을 목표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경제 ·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 심화는 물론이고 정치 · 안보 분야에서도 전략적으로 소통하는 좀 더 성숙된 관계로 발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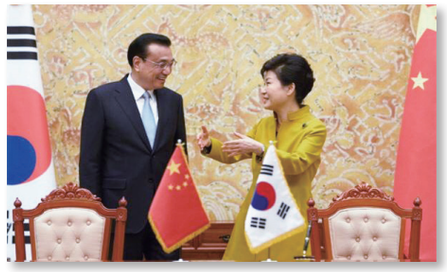
중국 전승 70주년 기념행사
(2015.9.3, 베이징)



중국 전승 70주년 기념행사 계기
한 · 중 정상회담(2015.9.2, 베이징)

특히 2013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빈 방중과 2014년 7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에 이어 2015년 9월 박 대통령의 9.3 중국 전승 70주년 기념행사 참석은 한 · 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한 계단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같은 계기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북한 도발 저지, 북핵문제 진전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강력한 대외메시지를 공동 발신하고 ▲한 · 일 · 중 3국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해 중국의 진전된 태도를 이끌어 내었으며 ▲한 · 중 FTA 활용 극대화 및 고부가가치 신산업, 금융, 문화산업 분야 협력 강화 등 미래지향적 경제협력을 위한 논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10월 말에는 리커창 중국 총리가 공식 방한(10.31~11.2)하여 박근혜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개최함으로써 ▲양측 간 최고위급 교류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동시에 ▲경제 ·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17건의 MOU를 체결하는 등 실질협력을 심화 · 확대하는 많은 성과를 도출하였다.



리커창 총리 공식 방한 계기
한 · 중 양자회담 개최(2015.10.31, 서울)



장더장 상무위원장 방한 계기
박 대통령 예방(2015.6.11, 서울)

이에 앞서 6월에는 장더장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방한(6.11~13)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고 정의화 국회의장과 한 · 중 국회의장 회담을 했다. 당시 한국 내 메르스 상황에도 불구하고 장 위원장은 예정대로 방한하여 한 · 중 간 높은 수준의 신뢰 관계를 입증하는 사례로 평가받았다.

또한 한 · 중 외교장관 간에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는데, 왕이 중국 외교부장 방한(3.21)을 포함하여 ASEAN+3 외교장관회의(8.5, 쿠알라룸푸르)와 ASEAN+3 정상회의(11.21, 쿠알라룸푸르)를 계기로 총 3차례의 양자 회담이 이루어졌다.

한편 2014년 7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방한 시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양국 민 · 관이 함께 참여하는 최초의 대화 형식으로서 한 · 중 1.5트랙 대화체제가 출범(7.7)하였고, '한 · 중 청년지도자 포럼(11월)' 및 '한 · 중 청년지도자 100명 상호 초청 사업(8, 10월)'도 성공적으로 개최됨으로써 양국 간 소통의 외연이 크게 확대되었다.

경제 · 통상 분야에서는 2015년 양국 간 교역액이 2,274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중국은 여전히 우리의 제1위 교역 · 수출 · 수입 대상국 지위를 유지하였고, 우리는 중국의 제1위 수입 대상국이자 제3위 교역 · 수출 대상국 지위를 유지하였다. 아울러 한 · 중 FTA가 발효(12.20)됨으로써 한 · 중 경제 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다.

인적 교류는 수교 당시 13만 명에 불과했던 한 · 중 간 인적 교류 규모가 2014년 최초로 1,000만 명(약 1,03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2015년에도 약 1,040만 명이 양국을 오갔으며, 양국 간 항공편도 매주 1,100편에 이르렀다.

또한 양국은 외교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3차 한 · 중 인문교류공동위'를 제주에서 개최(12.23)하였으며, 왕양 중국 부총리 방한(1.22~24)을 계기로 발표된 '2015년도 50개의 인문유대 세부사업'을 착실히 이행하였다.

아울러 루하오 헤이룽장성 성장(3월), 펑칭화 광시좡족자치구 당서기(4월) 등 중국 지방 고위 인사가 우리 측 초청으로 방한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토대를 견실

히 하고 실질 협력 증진에 기여하였다. 이외에도 중국 지방 정부 중견급 간부를 방한 초청하는 '미래지향 교류사업(총 5회)', '한 · 중 기자단 교류사업(11월)', '중국인 파워블로거 초청 사업(9월)' 등 다양한 교류 사업이 추진되었다.

또한 광복 70주년을 맞아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를 계기로 방중한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하에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9.4)이 개최됨으로써 중국 내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 정비와 관련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되었다.

한편 양국 정부는 양국 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갈등 사안의 관리 노력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특히 한 · 중 간 주요 현안 중 하나인 서해상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해결을 위해 제7차(5월, 부산) 및 제8차(11월, 칭다오) '한 · 중 어업문제 협력회의'가 개최되었다. 또한 양국은 2014년 7월 시 주석 방한을 계기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2015년에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가동하기로 합의해 2015년 12월 서울에서 제1차 공식회담을 개최하였다.

### 한 · 중 정상(급) 회담(환담 포함)

| 일자 | 주요 내용 |
|---|---|
| 2015.9.2 | 중국 전승 70주년 기념행사 계기 정상회담 |
| 2015.9.2 | 중국 전승 70주년 기념행사 계기 박 대통령 · 리 총리 면담 |
| 2015.10.31 | 리커창 중국 총리 공식 방한 계기 양자회담(박 대통령 · 리 총리) |

### 한 · 중 외교장관회담

| 일자 | 주요 내용 |
|---|---|
| 2015.3.21 | 한 · 일 · 중 외교장관회의 계기 외교장관회담 |
| 2015.8.5 | ASEAN+3 외교장관회의 계기 외교장관회담(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 2015.11.21 | ASEAN+3 정상회의 계기 외교장관회담(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 한 · 중 고위급 인사 교류

| 일자 | 주요 내용 |
|---|---|
| 2015.1.22~24 | 왕양 중국 부총리 방한 |
| 2015.1.28~30 | 최경환 경제부총리 방중 |
| 2015.2.4~5 | 창완취안 중국 국방부장 방한 |
| 2015.3.29~30 | 루하오 중국 헤이룽장성 성장 방한 |
| 2015.4.4~8 | 펑칭화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당서기 방한 |
| 2015.6.11~13 |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 방한 |
| 2015.6.11~13 | 장더장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 방한 |
| 2015.7.13~14 |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방중 |
| 2015.10.31~11.4 | 친이즈 중국 공청단 제1서기 방한(한 · 중 청년지도자 교류사업) |

## 3 한 · 일 · 중 3국 협력

2015년은 우리 정부의 외교 노력 결과로 11월 1일 서울에서 제6차 한 · 일 · 중 정상회의가 개최됨으로써 3국 협력체제가 복원된 한 해였다. 동북아 지역의 정치 안보적 분위기에서 3국 정상회의 개최 전망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의장국으로서 3국 정상회의를 조속히 재개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하였다.

먼저 2015년 3월에는 서울에서 3년 만에 제7차 한 · 일 · 중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여 '3국 정상회의를 가장 이른 편리한 시기에



제7차 한 · 일 · 중 외교장관회의(2015.3.21, 서울)

개최'하자는 3국 간 합의를 도출해 냄으로써 3국 협력 복원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3국 외교장관은 3국 차원에서 처음으로 역사 문제와 관련하여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향해 나간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3국이 관련 문제를 적절히 처리한다"는 합의가 담긴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하였다.

이후 우리 정부는 이러한 3국 외교장관 회의의 성과를 정상회의 개최로까지 이어가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2015년 6월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한 계기에 한 · 일 · 중 정상회의가 조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한 · 일 양국 간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2015년 9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 70주년 행사 참석차 중국을 방문하여 한 · 일 · 중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에 대한 중국 측의 최종 동의를 확보하였다.


제6차 한 · 일 · 중 정상회의(2015.11.1, 서울)

이 같은 과정을 통해 2015년 11월 1일 마침내 3년 반 만에 제6차 한 · 일 · 중 정상회의가 개최되었고, 3국 정상은 3국 협력이 완전히 복원되었다는 점에 공감하고 향후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3국 협력을 흔들림 없이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3국 정상은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북핵 불용과 한반도 통일에 관한 3국 차원의 공동 메시지를 발신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3국 협력을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경제 분야에서는 3국 FTA 협상을 가속화하고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협상 타결을 위해 공동 노력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2015년에도 3국 간 20개 분야별 장관급 회의를 포함한 60여 개 정부 간 협의체가 활발히 운영되어 통상, 농업, 보건, 관광, 환경, 문화, 재난관리 등 다방면에서 3국간 협력이 심화 · 발전하였다. 또한 3국 대학생 외교부 초청 프로그램(3.28), 3국 대학생 동아리 외교캠프(8.4~7), 3국 청년 모의정상회의(8.24~27), 3국 협력 논문경진대회(12.10~11) 등 미래 3국 협력의 주역인 3국 청년 간 교류 증진을 위한 노력도 계속되었다.

민간 차원에서도 3국 간 인적 · 물적 교류가 지속 확대 · 발전하였다. 2015년 3국 간 인적 교류는 2,376만 명으로 1999년(658만 명)보다 4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3국 간 교역액은 5,700억 달러로 1999년(1,200억 달러)보다 4.8배 이상 증가하였다.

2011년 설립된 3국협력사무국(TCS: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은 2015년 9월 제3기 사무총장단을 출범시켰으며 3국 협력 국제포럼(4.3), 3국 청년 대사프로그램(8.3~14), 3국 언론인 교류 프로그램(4.15~24) 등 3국 협력의 발전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특히 제6차 한 · 일 · 중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TCS 사무총장은 3국 협력체제의 모든 장관 협의체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

## 4 한 · 러 관계

한 · 러 양국은 수교 25주년을 맞이하여 정상외교, 국회의장 상호 방문, 외교장관 회담 등 고위급 교류, 실질협력 증진 협력 등을 통해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였다. 양국 수도 및 주요 도시에서 개최된 다양한 수교 기념행사

를 통해 우호 협력과 상호 이해를 증진시켰으며, 특히 7월 러시아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성공적으로 치러진 유라시아 친선특급 행사는 양국 국민의 우의와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가능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계기 한 · 러 정상회담
(2015.11.30, 파리)

박근혜 대통령은 9월 중국 전승절 행사 및 유엔총회, 11월 G20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정상 차원의 상호 의지를 확인하였다. 이어 11월 파리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계기로 한 · 러 정상회담을 통해 양 정상은 양국 관계 증진 방안과 한반도 정세에 관해 심도 있게 협의하였으며, 북핵 불용의 원칙하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확고한 의지로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대통령은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러시아의 신 동방정책이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으며, 어려운 국제 환경에도 불구하고 실질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러시아의 극동 · 시베리아 개발 협력 등을 통해 양국 관계를 좀 더 호혜적인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5월에는 세르게이 나리시킨 러시아 하원의장이 방한한 데 이어 정의화 국회의장이 9월 수교기념 행사 참석을 위해 러시아를 방문하여 양국 수교 이래 최초로 양국 의회 의장 간 연내 교차 방문이 이루어졌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2월과 8월 각각 뮌헨안보회의 및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쿠알라룸푸르)를 계기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 동북아 정세에 관해 긴밀히 협의하였다.

이외에도 5월 개최된 러시아의 전승 70주년 행사에 윤상현 대통령 특사가 참석하였으며 외교부 1차관 간 면담(7.27, 모스크바), 외교부 2차관의 7월 친선특급 행사 참석,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서기 방한(9.21~22), 차관급 정책협의회(12.7, 모스크바) 개최 등 각급별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 한 · 러 고위급 인사 교류

| 일자 | 주요 내용 |
|---|---|
| 2015.2.8 | 뮌헨안보회의 계기 한 · 러 외교장관 회담(뮌헨) |
| 2015.2.13 | 제23차 한 · 러 지역국장협의회(모스크바) |
| 2015.5.18~19 | 나리시킨 러 하원의장 방한 |
| 2015.6.16 | 제14차 한 · 러 자원협력위원회(모스크바) |
| 2015.6.24 | 제14차 한 · 러 영사국장회의(서울) |
| 2015.6.29~30 | 제17차 한 · 러 원자력 공동조정위원회(서울) |
| 2015.8.5 | ARF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 · 러 외교장관회담(쿠알라룸푸르) |
| 2015.9.5 | 제9차 극동시베리아분과위원회(블라디보스토크) |
| 2015.9.5 | 제8차 한 · 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블라디보스토크) |
| 2015.9.21~22 | 파트루셰프 러 연방안보회의 서기 방한 |
| 2015.9.29~10.5 | 정의화 국회의장 방러 |
| 2015.10.23 | 제14차 한 · 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블라디보스토크) |
| 2015.11.16~19 | 제25차 한 · 러 어업위원회(서울) |
| 2015.11.18~22 | 갈루시카 러 극동개발부 장관 방한 |
| 2015.11.30 |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계기 한 · 러 정상회담(파리) |
| 2015.12.7 | 제15차 한 · 러 정책협의회(모스크바) |

경제협력에서도 양국은 유가 하락, 루블화 가치 하락에 따른 러시아 경제 침체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 간 협의체 활성화,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협력 확대 등을 통한 공동 노력을 계속하였다.

10월 경제 부총리급 경제공동위원회, 9월 차관급 극동시베리아분과위원회를 비롯해 농업위원회, 어업위원회, 자원위원회 등 각 분야 12개 정부 간 협의체가 개최되어 양국의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였다.

특히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제1차 동방경제포럼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주요 정부 인사 및 기업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12월에는 한 · 러 투융자플랫폼 실무협의회 개최를 통해 극동지역 내 호혜적 사업 발굴 및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 최근 한 · 러 무역 동향

(단위: 억 달러)

| 구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수출 | 41.9 | 77.6 | 103.1 | 111.0 | 111.5 | 101.4 | 46.9 |
| 수입 | 57.9 | 99.0 | 108.5 | 113.5 | 115.0 | 156.7 | 113.1 |
| 대러 수지 | -15.9 | -21.4 | -5.5 | -2.6 | -3.5 | -55.4 | -66.2 |
| **무역 총액** | **99.8** | **176.6** | **211.6** | **224.5** | **226.5** | **258.1** | **160** |

출처 한국무역협회

나진 · 하산 물류사업은 러시아 시베리아횡단철도와 북한 나진항을 철도로 연결하고 러시아산 석탄을 선박을 이용하여 우리 국내로 도입하는 상업적 성격의 남 · 북 · 러 3각협력 시범사업이다. 우리 기업 3사(POSCO, 현대상선, KORAIL)와 러시아 철도공사 간 협력을 통해 2014년 11월 석탄 운송 시범사업이 최초 시행된 이후 석탄 운송 시범사업이 4월과 5월(2차), 11월과 12월(3차) 총 2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3차 시범운송에서는 중국에서 생수를 컨테이너로 반입함으로써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도 물류 운송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수교 25주년을 맞이하여 정치, 경제,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다채로운 사업이 연중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7월에는 블라디보스토크, 우수리스크, 하바롭스크, 이르쿠츠크, 노보시비르스크, 예카테린부르크, 모스크바 등 러시아 7개 도시에서 유라시아 대축제, 한 · 러 산학협동 유망 기술 상담회, 철도교통 세미나, 수교기념 음악회 등이 친선특급 행사를 계기로 개최되었다.

또한 2010년 양국 수교 20주년을 기념하여 출범한 한 · 러 대화는 양국 정상이 직접 참석하는 대화 채널로서 그동안 산 · 학 · 민 · 관 협력 확대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해 왔으며, 양국이 서로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호혜 협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등 양국 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한 · 러 대화는 2015년 3월 수교 25주년 기념 정경포럼 개최 등 정치, 경제, 문화예술, 교육, 언론, 차세대 분야에서 연중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시행하였다.

### 2015년 한 · 러 대화 사업 추진 현황

| | |
|---|---|
| 2015.1.28~2.1 | 한 · 러 대학생 대화(칼리닌그라드) |
| 2015.3.6 | 한 · 러 수교 25주년 기념 정경포럼 |
| 2015.5.19 | 나리쉬킨 러시아 하원의장 초청 라운드 테이블 |
| 2015.7.15 | 한 · 러 산학협동유망기술 포럼(블라디보스토크) |

| | |
|---|---|
| 2015.7.20/27 | 한 · 러 차세대교류(이르쿠츠크, 모스크바) |
| 2015.10.17 | 수교 25주년 기념 학술대회 |
| 2015.11.16~18 | 제5차 한 · 러 차세대전문가 포럼 |
| 2015.11.19~21 | 박경리 학술세미나(상트페테르부르크) |
| 2015.11.30~12.2 | 제3차 한 · 러 대학총장 포럼 |
| 2015.12.19 | 차이콥스키의 밤 |
| 2015.12.22 | 한 · 러 대화의 밤 |

이와 별도로 2014년 7월 러시아 법무부 비영리민간법인으로 등록된 러시아 내 지한파 네트워크인 '러 · 한 소사이어티'도 2015년 9월 30일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MGIMO)에서 양국 정 · 재계, 학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교 25주년 기념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등 민간 분야의 교류협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우리 정부는 한 · 러 관계 발전을 위한 저변 확대와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한국어 교육 강화, 우리 문화 소개 및 보급 확대, 재러시아 동포에 대한 학술연구 강화 등 현지 맞춤형 공공외교 노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러시아 한국문화원은 양국 수교일(9.30)에 즈음하여 2015년 9월 마지막 주를 '한국문화주간'으로 지정하고 모스크바에서 한국 영화제, 퓨전 국악, 현대무용, 태권도 시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다.

## 5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추진 및 유라시아 협력 확대

### 1)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역내 대화와 협력을 증진하여 신뢰를 점진적으로 축적해 나감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의 기틀을 만들어 가는 다자협력 프로세스(process)이다. 박근혜 정부의 '신뢰외교(Trustpolitik)' 일환으로, 대립과 갈등의 동북아 역내 구도를 대화와 협력의 질서로 전환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미래지향적 노력이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참여 가능한 국가부터, 협력이 쉬운 분야부터, 참가국이 합의하는 속도에 따라 대화와 협력을 모색하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즉, 역내 모든 국가는 공동의 설계자(co-architect)로서 이 구상의 주인이며 동북아 지역의 공통 위협요인이자 비교적 덜 민감한 연성안보 의제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점차 경성안보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한 · 중 · 일 3국 협력, EAS, ARF 등 기존 역내 다자협의체들과 경쟁보다는 협력적 보완 관계를 모색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한다.

2013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이 이 구상을 최초로 제시한 이래 지난 3년 동안 많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우선 활발한 정상 및 고위급 외교를 통해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폭넓게 확산되었다. 2015년 말 현재 관련국(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을 포함해 총 29개국과 유엔, EU 등 8개 다자협의체가 이 구상의 지지를 표명하였다. 특히 올해는 주요국 정상들의 지지 표명이 잇따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10월 한 · 미 정상회

담 공동기자회견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 구상을 환영하였으며, 11월 한 · 일 · 중 정상회의 시 채택된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은 이 구상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추동력을 제공했다.

**한 · 일 · 중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 중**

> 4. 우리는 역내 협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평가하고, 역내 신뢰와 협력 구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일 · 중 양국 지도자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역내 신뢰구축을 목표로 하는 **한국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하였으며,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관련국 정부 차원의 협력도 한층 심화되었다. 2014년에 이어 2015년에 두 번째로 개최된 '동북아평화협력회의(10.28)'에서는 참석 수준이 국장급에서 좀 더 고위급으로 격상되었고, 처음으로 「의장요약문(Chair's Summary)」을 채택하고 제3차 회의 개최에 합의하는 등 정부 간 협의회의 정례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한편 민관이 함께하는 '2015 동북아평화협력포럼(10.27~29)'이 이 회의와 병행 개최되어 정부 고위인사, 학계 및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기능협력 분야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제2차 동북아평화협력회의(2015.10.28, 서울)

연성안보 분야의 기능별 협력도 꾸준히 추진되고 있어 서서히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는 한 · 일 · 중 3국 정상회의(11.1)에서 민간 원자력 협력 관련 지역 협력프로세스 증진에 합의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8 · 15 경축사를 통해 제안한 '동북아원자력안전협의체'와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한 · 중 · 일 고위규제자회의(TRM: Top Regulators' Meeting)의 참석 범위와 의제를 확대한 '동북아원자력안전협력회의(제3차 TRM+, 10.22~23)'에서 이 협의체 추진을 위한 기본 원칙과 방향을 공유하였으며, 2015년 한 해 동안 한 · 일 · 중 3국 정부 간 양자 및 3자 협의를 수시로 개최하였다. 이 밖에도 재난관리, 보건, 사이버스페이스 등 여타 중점 기능협력 분야에서도 꾸준히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고 있다.

**2015년 기능협력 분야별 주요 성과**

- 원자력 안전: 한 · 일 · 중 3국 정상회의(11.1)에서 **민간 원자력 협력 강화 합의** 및 **동북아원자력안전협력회의(제3차 TRM+)**(10.22~23) 개최
- 재난관리: 제3차 세계재난위험경감총회 계기 동북아 국가 간 별도 회의(3.16) 및 **제3차 한 · 중 · 일 재난대응 도상훈련(TTX, 4.28)에 미 · 러 · 몽 참관**
- 보건: **제2차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고위급회의 계기 한 · 미 · 일 · 중 차관보급 조찬 회동(9.9)
- 에너지안보: **제3차 동북아에너지안보포럼** 개최(12.17)
- 환경: 제20차 NEASPEC 고위급회의 대비 실무회의(10.16)
- 마약: 제25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계기 마약분야 동북아 국가 간 회동(9.23)
- 사이버스페이스: 헤이그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계기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조찬 협의(4.17)

이와 함께 NATO(3월), EU(6월), OSCE(6월), ASEAN(10월) 등 지역협력의

모범이 되고 있는 국제기구 및 지역협의체와 협력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다자협력의 경험과 전문성을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지지 기반을 넓혀 가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이 구상을 내실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못지않게 이를 대내외적으로 잘 알리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 이를 위해 미 · 일 · 러 · 중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현지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구상의 설명책자를 5개 국어(국문 및 영 · 일 · 중 · 러)로 발간하였으며, 지난 11월에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 홈페이지(www.napci.net)를 개설하였다. 이러한 홍보 활동을 통해 우리 국민 및 해외에서 이해도가 증진되고 협력 공감대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정부는 어려운 동북아 안보 상황 속에서도 역내 신뢰와 협력의 질서 창출을 위해 동북아협력구상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관련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견인하고, 국제 · 지역기구들과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며, 기능분야별 협력 사업을 활발히 펼쳐 나감으로써 역내 국가 간 대화와 협력의 관행을 쌓아 나갈 것이다.

### 2)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박근혜 정부는 아시아와 유럽의 연계성과 교류 협력 증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번영과 평화를 이룩하고자 유라시아 주요 권역을 대상으로 정상외교, 역내 연계성 증진을 위한 시범사업, 호혜적 협력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추진하였다.

정상외교 차원에서는 4월과 5월 우리나라를 각각 방문한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대통령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지지를 재확인하였으며 9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 · EU 정상회담에서 28개 EU 회원국들이 유라시아 구상을 명시적으로 지지하였다. 9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 · 중 정상회담에서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 간 협력 MOU가 체결되었으며 11월 파리 한 · 러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신 동방정책 간의 호혜적 협력과 관련한 인식을 같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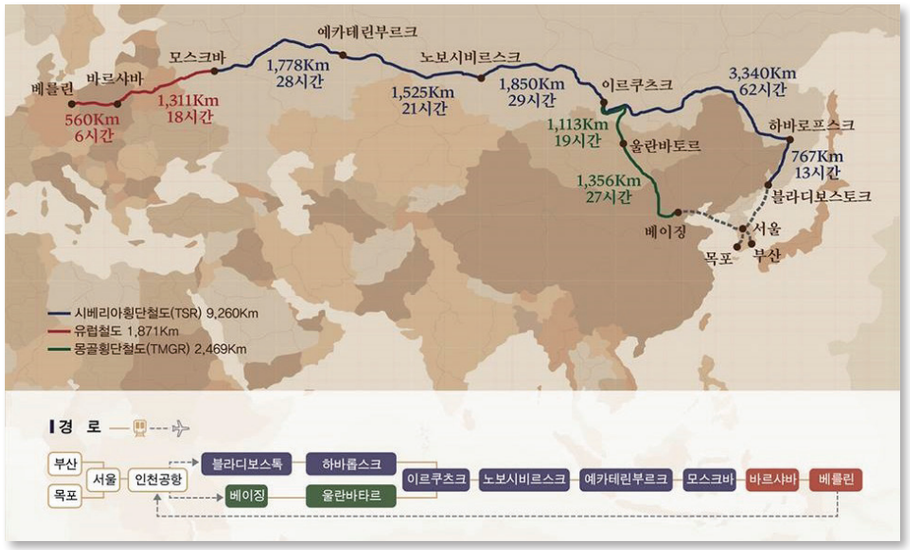
유라시아 연계성 증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유라시아 대륙에서 유일한 단절고리인 한반도종단철도 연결의 중요성과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7월에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시범사업인 유라시아 친선특급 사업을 추진하였다.

| | |
|---|---|
| 러시아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 일대일로 국제세미나 ▲한 · 러상호방문의 해 계기로 한국 관광 사진전 ▲한 · 러 산학협동 유망 기술 상담회 ▲동북아시아 평화협력구상회의 ▲독립유적지 탐방 ▲고려문화센터 문화 공연 ▲유라시아 대축제 ▲바이칼 호수 탐방 및 한 · 러 대학생 교류 ▲철도교통 세미나 ▲한국 영화제 ▲유럽 · 아시아 분기점 행사 ▲대학생 교류 행사 ▲한 · 러 수교 25주년 기념 음악회 ▲한 · 러 협력 국제회의 |
| 중국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 일대일로 국제 세미나 ▲남선 환영 리셉션 |
| 몽골 | ▲한 · 몽골 수교 25주년 기념 행사 ▲이태준 선생 기념공원 개보수 착공식 |
| 폴란드 | ▲국제철도협력기구 세미나 ▲폴 · 독 화해경험 공유 세미나 |
| 독일 | ▲한 · 독 대학생 통일 토론회 ▲통일기원 행진 ▲브란덴부르크문 광장 앞 폐막 리셉션 및 특별 야외공연 개최 |

'하나의 꿈, 하나의 유라시아'를 주제로 한 친선특급 사업에는 독립유공자 후손, 국회의원, 재계 인사, 학계 인사, 언론인 등 각계각층 인사 300여 명이 참가하여 19박 20일 동안 러시아, 중국, 몽골, 폴란드, 벨라루스, 독일 등 6개국 10개 도시를 거치며 정치, 경제, 문화, 학술 분야를 아우르는 30여 가지의 다양한 행

사를 개최하였다. 8월 17일에는 우리나라의 최북단 철도역인 도라산역에서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지구 3분의 1에 달하는 1만 4,400㎞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을 축하하고 평화통일을 기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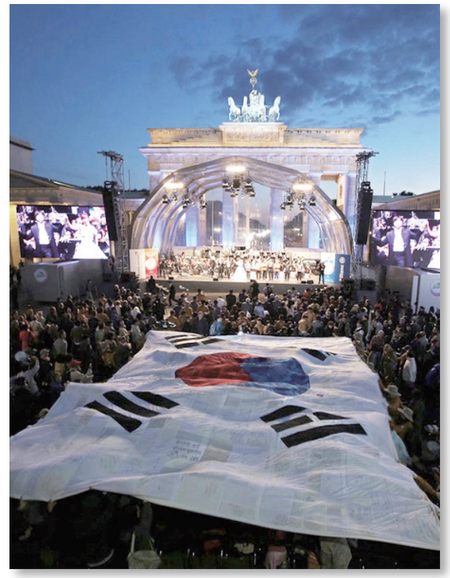
친선특급 사업은 공공외교 측면에서도 한 · 러 수교 25주년, 한 · 몽골 수교 25주년, 독일 통일 25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있는 행사들을 통해 방문국과의 우호협력을 증진하고 한국의 멋과 매력을 발산하였다.




유라시아 친선특급 노선 소개(2015.7.14~30)

이외에도 8월 북극외교장관회의(앵커리지) 참석, 9월 유라시아 복합 교통 · 물류네크워크 국제심포지엄(서울) 개최, 남 · 북 · 러 3각협력의 민간 시범사업인 나진 · 하산 물류사업 측면 지원 등 연계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역내 호혜적 협력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정상들과 함께 한 · 비세그라드(V4) 정상회담을 12월에 체코 프라하에서 최초로 개최하였다. 중앙아 5개국과는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9차 한 · 중앙아 협력포럼에서 한 · 중앙아 협력사무국을 포럼 창설 10주년이 되는 2016년에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서울 선언'을 채택하였다.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이 참여하는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의장국으로서 GTI의 국제기구화 노력을 선도하였으며 CICA, 노르딕 등 유라시아 대륙 내 다양한 지역협의체와의 협력도 강화하였다.



브란덴부르크문 광장 앞 폐막 리셉션
(2015.7.30, 베를린)

아울러 우리나라와 상호 보완적인 경제 구조인 역내 국가들과 ICT, 환경, 보건의료,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첨단 기술과 경험을 전수하는 지식공유사업(KSP)을 통해 유라시아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